

February
Polar Policy Net 2015

Contents

◇ 과학기술포커스

◇ 해양수산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◇ 법제이슈포커스

과학기술포커스

"2015년 국가연구개발(R&D), 경제·산업 현장과 더 가까이!"

- 미래창조과학부, 「2015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」 발표(1.28)

오피니언

- 미래부,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업화·경제적 활용 강조
→ 대형 극지연구과제 기획단계에서 기초과학연구 특성을 반영한 중·장기적 산업경제와의 연계 강화 필요

본문

- 업무계획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"R&D 현장착근(기술사업화)"을 강조하며, 연구개발 파생산업을 고도화해 '17년까지 관련 기업 2500개 육성 목표 제시
- 특히 예시로 제시했지만 일정규모(5억원 ↑) 이상 과제에 대해 과제 기획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제시 의무화
- 이는 기초과학 연구분야에서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향후 대형 극지연구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 교육, 외부 컨설팅 활용 등을 통한 산업경제와의 연계 강화 필요
- R&D 성과평가를 질 중심의 정성평가체제로 전면 혁신
- 연구소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표준성과지표」에 따라 2014년 경영성과계획 수립 당시 '표준화된 영향력 지수' 등 질적 성과지표 도입



February
Polar Policy Net 2015

Contents

◇ 과학기술포커스

◇ 해양수산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◇ 법제이슈포커스

해양수산포커스

해양수산부, 전략적인 극지활동 추진을 위한 2개 세부전략 내세워

- 해양수산부, 「2015년도 업무계획」 발표(1.29.)

오피니언

- 해양수산부(이하 해수부)는 「2015년도 업무계획」을 통하여 전략적 극지활동 추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제2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을 밝힘. 이는 주관부처의 극지 인프라 확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 됨

본문

- 해수부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6대 정책과제 중,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4개 방안을 제시
-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 투자 강화 방안으로 **전략적 극지활동 추진 계획 제시**
- 인프라 구축과 관련, 제2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,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의 인프라(활주로, 항공망)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제시
- 연구 활성화와 관련, 양극해 및 남극 대륙연구 강화, 북극항로 조사, 항해안전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
- 특히, 제2 쇄빙연구선의 경우 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언급하고 있어 주관부처의 극지 인프라 확대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 해석

전략적인 극지활동 추진

인프라 구축

- > 준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추진
예비타당성 조사(2015년 하반기)
- > 남극 장보고기지 인근 활주로 건설 및 항공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

연구 활성화

- > 양극해 남극 대륙연구 강화(95억원)
- >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조사 확대 및 항해안전시스템 개발 (2014년~2018년, 50억원)
- > 북극권 대학 연구 학위과정 개설 등 극지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(2015년 3월)

Contents

◇ 과학기술포커스

◇ 해양수산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◇ 법제이슈포커스

해외이슈포커스

미 오바마 행정부, 2015 북극이사회 의장국 수행에 있어 환경이슈 강조

- 오바마 대통령, 북극해 9천8백만 에이커에 해당하는 유가스전 시추금지

오피니언

- 북극권의 균형있는 개발에 대한 논의가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해 질 전망

본문

-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북극해의 9천8백만 에이커에 해당하는 유가스전 시추활동을 금지함
- 이는 멕시코만의 신규 탐사사업이 개시된 것과 대조를 이룸
- 따라서, 알래스카 연안의 Beaufort와 Chukchi 해에 위치한 유가스 신규탐사 및 개발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
- 이는 곧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 지역의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 1천2백만 에이커를 유가스 개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함
- 이와 관련하여, 미국 정부는 다가오는 5월부터 의장국을 수행과 더불어 북극이사회 내에 환경관련 워킹그룹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
- 그러나, 최근 1월 25일 Shell이 발표한 2015년 탐사 및 개발 계획에는 여전히 알래스카지역이 포함되고 있어, Shell이 보유하고 있는 탐사권에 대한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, 앞으로 귀추가 주목됨 (자료: Alaska Dispatch News,



Contents

◇ 과학기술포커스

◇ 해양수산포커스

◇ 해외이슈포커스

◇ 법제이슈포커스

법제이슈포커스

우리나라가 바로보는 극지, 극지활동국이 바라보는 우리나라

- 세종연구원, "해상권과 한국의 생존전략" 전문가 라운드회의 개최(2.3)
- 외교부, D. Rothwell 교수(호주국립대) 초청 해양법 콜로키움 개최(2.11)

오피니언

- 전통적인 남-북극 활동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자원개발 등 경제적 접근태도를 우려하고 있음. 우리나라는 자원확보라는 분홍빛 꿈을 키우기에 앞서, 국제공동과학연구 등 인류공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행하여야 함.

본문

- 지난 2월 3일 세종연구원이 개최한 '해상권과 한국의 생존 전략'에 관한 라운드회의에서 남북극을 포함한 해양전략 이슈를 논의함
-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극지를 자원 또는 경제이익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음
- 주명건 이사장(세종연구원)은 "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선단규모의 원자력쇄빙선 건조"를, 박성욱 박사(KIOS)는 "남극자원 개발경쟁과 관련하여,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, 남극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적 안목"을, 김길수 교수(해양대)는 "북극항로 개발 필요성"을 역설함.
- 전통적인 극지활동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 중심적 극지활동을 경계하고 있음
- 지난 해 10월 "북극과 남극의 보전과 개발에 참여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동기"를 주제로 6대륙 15개국 50여명의 극지법 전문가들이 모여 제7차 극지법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
- 남극의 호주-일본 고래잡이 분쟁,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불법어업, 중국의 남극관광 급증을 지적하면서 아시아의 남극환경 훼손을 우려하였고, 북극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행보를 두고 비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원주민 생활파괴를 우려함
- 우리나라는 명시적 비난을 빚겨갔으나, 자원개발에 주목하는 아시아의 일국으로 수차례 언급되었음
- 남극대륙은 영유권주장과 광물자원활동이 금지되어 있고, 북극해 대부분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임. 우리가 궁극적으로 극지자원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, 우선은 환경보호 등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과학적, 연구적 협력으로부터 물꼬를 터 나가야 함